

주간 통일정세

2016-39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9.24	北 김정은, 의료기구 제조공장 시찰…‘고난의 행군’ 언급(연합뉴스)
		北외무상 유엔서 “핵무장은 국가노선…정당한 자위조치”(연합뉴스)
	9.25	北 김정은, 홍수 피해지 안가고 또 선물만 전달(연합뉴스)
	9.26	北, ‘핵실험장 인근주민 피해說’에 “무지의 극치” 반발(연합뉴스)
		北 매체, ‘홍수피해’ 무산광산 조업재개 보도(연합뉴스)
	9.27	北 김정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 전달(연합뉴스)
		北 김정은 “지질탐사로 경제강국 건설”…‘일꾼회의’ 개최(연합뉴스)
		NHK “北리용호 측근, 핵실험금지 결의안 ‘신경도 안쓴다’ 말해”(연합뉴스)
		北 홍수피해 현장에 예술인들도 ‘총동원’(연합뉴스)
	9.28	北, 파괴된 함북선 철길 개통…수해복구 포스터 공개(연합뉴스)
		北, 수해지역 쌀값 등 물가통제에 총력(연합뉴스)
		北 “핵무기 개발 기본적으로 완료” 주장(연합뉴스)
		北 “비동맹운동 국가들 우리 지지…제재 철회 요구” 주장(연합뉴스)
	9.29	北, 이일수 조선광선은행 총재 재작년 숙청(연합뉴스)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기구, 노동당 39호실로 통합(연합뉴스)		
北, 수해복구 장비 상표 가리고 공개…제재망 회피 꿈수(연합뉴스)		
9.30	김정은, 국제학술회 열고 유학생 받아라…김일성대에 주문(연합뉴스)	
	리용호 외무상, 유엔기구에 은밀히 수해복구 지원 요청(연합뉴스)	
경제	9.24	대북제재에도 中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27% 증가 반전(연합뉴스)
	9.27	中서 반나절 북한관광상품 ‘볼티’…두달여만에 1만6천명 이용(연합뉴스)
	9.28	中독자제재 가속에 단둥 북중무역 칼바람…홍상폐쇄·선박억류(연합뉴스)
	9.29	북한, 처음으로 1인당 GDP 1천 달러 넘겨(연합뉴스)
		中 단둥 홍상 대북 핵물자 수송루트는 압록강 밀무역(연합뉴스)
	9.30	두만강 일대 홍수 이후 북중교역 차질…세관피해로 통관 중단(연합뉴스)
사회 문화	9.27	北, 중국 휴대전화 이용한 對한국 교신 엄벌(연합뉴스)
외교 국방	9.24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북한, 핵 프로그램 포기하라”(연합뉴스)
		北조평통 “반기문, 제재 가담시 대가 값비싸게 치를 것” 비난(연합뉴스)
		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8개국에 CTBT 비준 촉구(연합뉴스)

9.25	북중접경지에 새 교량 건설 중·양국 협력사업 여전(연합뉴스)
	중국 매체, 김정은 강력 비난·“스스로 멸망 앞당겨”(연합뉴스)
	중국 홍상 관련 北기업인들 조사·광선은행 포함된 듯(연합뉴스)
	전직 CIA국장, 북한 핵미사일 3~5년 내 미국 사정권(연합뉴스)
9.26	北 “미국에 승리·美 대북정책 재검토해야” 주장(연합뉴스)
	日국회, 대북 독자제재 강화해야·北핵실험 규탄결의문 채택(연합뉴스)
	IAEA 총회 개막·북핵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연합뉴스)
	美 北 ICBM 위협 대응 내년 초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실험(연합뉴스)
9.27	北, 美핵위협 가중되면 우리 핵철폐 천백배 될 것(연합뉴스)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중단등홍상 직접 제재·中기업은 처음(연합뉴스)
	美, 북한 등 적대국 기습 핵공격 대비해 핵전력 현대화 추진(연합뉴스)
9.28	백악관, 한반도비핵화 위해 제재 바탕 외교 노력 경주(연합뉴스)
	美 하원, 북한에 현금·금 지급금지 법안 채택(연합뉴스)
	러셀, 국제금융망서 北매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연합뉴스)
	백악관, 北핵개발 지원 中기업 단등홍상 제재는 “오바마의 의지”(연합뉴스)
	美, 국제금융망서 北매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연합뉴스)
	마샤오홍, 세관당국에 뇌물주고 대북수출·中도 유착관계 조사(연합뉴스)
	英, 제재대상 北 국영보험사 런던지사 추방(연합뉴스)
	벨라루스 외무부, 北대사관 공식 개설 안됐다·대사 부임 안해(연합뉴스)
9.29	美, 北관련 홍상외에 中기업 추가조사·北고려항공 조사도 시사(연합뉴스)
	美정부, 각국에 北과의 외교·경제관계 단절·격하 공식 요청(연합뉴스)
	美국무, TPP 비준 거부 되면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지 않을것(연합뉴스)
	러셀 美차관보 “미얀마 군부 일각 여전히 북한과 협력” 우려(연합뉴스)
	北, 美 B-1B 한반도 출동에 “미제의 허세” 주장(연합뉴스)
	北 “中 정부,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용 물자 기증”(연합뉴스)
9.30	美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SWIFT까지 겨냥 초강경 법안 발의(연합뉴스)
	러시아, 강력한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지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9. 24.

■ 北 김정은, 의료기구 제조공장 시찰...‘고난의 행군’ 언급(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해현장 대신 평양의 의료기구 제조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대동강주사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공장은 (김정일)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영도) 밑에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과 흑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일떠섰다”고 말함.
- 이날 현지시찰에는 서흥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과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함.

2016. 9. 25.

■ 北 김정은, 홍수 피해지 안가고 또 선물만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홍수 피해 현장은 찾지 않은 채 또 선물만 보냄.
- 북한 조선중앙TV는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함북도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주시었다”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24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보도함.
- 다만, 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밝히지 않았음. 보도된 화면을 보더라도 선물이 무엇인지 식별하기 어려움.

2016. 9. 27.

■ 北 김정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 전달(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이 27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크나큰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며 “이번에 함북도 큰물피해지역주민들에게 물고기도 보내주셨다”고 밝힘.

- 이어 “큰물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주기 위한 열차편성과 수송조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 사랑속에 북부지구의 인민들이 은정어린 물고기를 눈물겹게 받아안았다”며 “피해지역주민들은 친어버이의 뜨겁고 다심한 그 사랑에 걱정의 눈물을 흘리며 평양 하늘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고 선전함.

■ 北 김정은 “지질탐사로 경제강국 건설”...‘일꾼회의’ 개최(연합뉴스)

- 북한의 ‘전국지질탐사부문 일꾼 열성자회의’가 지난 2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함.
- 김정은 당 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질탐사 사업을 중시하고 앞세워나가야 우리 식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자체의 무진장한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자립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속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고 밝힘.
- 이날 행사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오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상, 로두철 내각 부총리,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함.

2016. 9. 30.

■ 김정은, 국제학술회 열고 유학생 받아라...김일성대에 주문(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제학술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김일성종합대학에 지시함.
-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창립 70주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학술토론회들을 정기적으로 조직 진행하며 다른 나라의 권위 있는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확대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정은은 또 서한에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 조선어(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전공학과들에서 본과생 및 박사원생, 실습생 교육을 하도록 하며 박사원생들을 위주로 하여 다른 나라들에 유학을 보내는 사업도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9. 24.

■ 北외무상 유엔서 “핵무장은 국가노선...정당한 자위조치”(연합뉴스)

-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우리와 적대 관계인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안전은 믿음직한 핵 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고 말함.
- 리 외무상은 “미국의 위협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그 대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주장함.
-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국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미국을 향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함.

2016. 9. 27.

■ NHK “北리용호 측근, 핵실험금지 결의안 ‘신경도 안쓴다’ 말해”(연합뉴스)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한 측근은 유엔 안보리의 핵실험 금지 결의안 채택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NHK가 27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에 동행했던 이 측근은 NHK에 “핵무장은 국가 노선”이라면서 지난 23일 안보리가 핵실험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힘.
- 리 외무상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핵무장은 국가 노선”, “미국의 위협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으며 지난 26일 오전 귀국 길에 올랐음.

2016. 9. 29.

■ 北, 이일수 조선광선은행 총재 재직년 숙청(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 단둥에서 조선광선은행 총재로 활동하던 이일수를 2년 전 소환해 숙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 중국 랴오닝성에 체류하는 한 북한 무역업자는 RFA에 “광선은행 총재로 있던 이일수는 2014년경 북한으로 소환돼 숙청됐다”면서 “죄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성택 계열로 분류돼 처벌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익명을 요구한 중국 현지인은 “조선광선은행은 이름만 은행이었을 뿐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영업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은행 상호도 걸지 못하고 불법 거래했던 환전 거래소 수준이었다”며 “광선은행이 외화를 환전할 때도 수수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뺐다”고 전했다고 RFA는 밝힘.

2016. 9. 30.

■ 리용호 외무상, 유엔기구에 은밀히 수해복구 지원 요청(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제71차 유엔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나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RFA는 리 외무상이 지난 23일 헬렌 클라크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를, 지난 24일에는 스티븐 오브라이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국장과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사(IFRC) 총재를 각각 만나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힘.
- 리 외무상은 유엔개발계획과 올해로 종료되는 북한 국가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계획, 유엔개발계획이 현재 주도하는 북한 홍수 피해 지원사업 문제 등을 논의함.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9. 27.

■ 北 홍수피해 현장에 예술인들도 '총동원'(연합뉴스)

- 북한의 예술인들이 함경북도 홍수 피해 현장에 총동원돼 복구 작업을 독려하고 있음. 북한 평양방송은 27일 “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들고 회령시, 무산군, 연사군 등 피해지역으로 달려나온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혁명적이고 기백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이며 전투장들을 들었다 놓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은 함북도의 피해복구전 역들을 오가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으로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TV도 26일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들이 무산군을 비롯한 여러군안의 피해복구 전투장들을 찾아 힘있는 화선식 경제선동을 진행했다”며 “도로복구장과 살림집 건설장을 찾은 시인들은 서정시 ‘인민사랑의 전역에 승전포성 울린다’를 비롯한 여러 편의 시들을 격조 높이 낭송했다”고 보도함.

2016. 9. 28.

■ **北, 파괴된 함북선 철길 개통...수해복구 포스터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함경북도에서 가장 긴 철길인 ‘함북선’을 다시 개통했다고 28일 밝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파괴된 철길 복구전투를 드세게 벌려 지난 27일 함북선을 개통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경흥군 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간 군인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의 돌격대원들이 드센 공격전을 벌여 살림집 벽체축조공사를 60% 계선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울러 노동신문은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의 역량을 홍수 피해 복구에 총집중한다는 내용의 선전화(포스터)도 이날 공개함.

■ **北, 수해지역 쌀값 등 물가통제에 총력(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수해지역에서 쌀 사재기와 가격 폭등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28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수해지역에) 보안원과 순찰대가 출동해서 쌀 사재기 및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막고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쌀 가격 등이 큰물(홍수) 피해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힘.
-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이불, 옷, 내의, 숟가락, 젓가락 등으로 구성된 세트가 구호물자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각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서 거둬들인 물자 등을 모아놓은 것 같다”고 설명함.

2016. 9. 29.

■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기구, 노동당 39호실로 통합(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노동당 39호실로 통합된 것으로 29일 확인됨.
- 통일부가 공개한 ‘2016 북한 권력기구도’를 보면 노동당 전문부서 중 ‘2015 북한 권력기구도’에선 존재했던 당 38호실이 사라짐.
- 통일부는 인민무력성과 국가안전보위성, 인민보안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김정은이 수장을 맡은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권력기구도를 작성하면서 ‘소속은 추가 확인 필요’이라는 단서를 달았음.

■ **北, 수해복구 장비 상표 가리고 공개…제재망 회피 꼼수(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함경북도 수해복구 현장에 동원된 각종 건설장비를 보여주면서 상표를 의도적으로 지우거나 가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북한이 제재 감시망을 피하려고 외국 제품의 상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음.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자 1면 하단에 황해남도 소재 재령광산에서 철광석 생산 작업 중인 굴착기 사진을 게재했는데 상표 부분을 ‘총돌격전’이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로 덮었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9. 26.

■ **北, ‘핵실험장 인근주민 피해說’에 “무지의 극치” 반발(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살던 주민들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거짓과 모략에 찌들대로 찌든 자들의 악담질”이라며 비난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모략적인 주민피해 타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박근혜 패당이 우리의 핵시험(핵실험)이 주변 지역 인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모략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매체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역적패당이 우리의 정당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그 무슨 ‘위협’과 ‘도발’로 헐뜯다 못해 ‘주민피해’니 ‘영토파괴’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지무식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지를 부림.

■ **北 매체, ‘홍수피해’ 무산광산 조업재개 보도(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대 철광석 산지로 유명한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태풍 '라이언록' 피해복구 작업을 마치고 주요공정의 조업을 재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26일 “이곳(무산광산) 일꾼(일꾼)들과 광부들의 줄기찬 투쟁으로 지난 16일부터 큰물(홍수) 피해를 1차적으로 가신 주요공정들에서 본격적인 철정광 생산이 시작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됐다”고 현지 조업재개 상황을 소개함.
- 함경북도 무산읍에 있는 무산광산은 북한 최대 철광석 노천광산으로 1916년에 발견돼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됐으며, 매장량이 17억t으로 추정됨.

2016. 9. 28.

■ 北 “핵무기 개발 기본적으로 완료”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고 주러 북한 대사관이 현지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을 통해 27일(현지시간) 주장함.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은 자국 ‘핵무기연구소’를 인용한 보도문에서 “최근 (5차) 핵실험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전략 탄도로켓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힘.
- 보도문은 “탄두 표준화와 규격화는 다양한 (핵)분열 물질의 생산과 이용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다양한 용도의 소형화하고 경량화된 보다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핵탄두를 선택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 제작하고, 핵장약(핵탄두)을 무기에 장착하는 수준을 새롭게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설명함.

■ 北 “비동맹운동 국가들 우리 지지…제재 철회 요구”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국제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자국을 향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철회도 요구했다고 28일 주장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제17차 블러블가담국가 수뇌자회의(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운동성원국들의 공통 입장을 반영한 최종문건이 채택됐다”면서 “문건에서는 성원국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들이 타당한 법률적 근거와 공정성, 정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가 표시됐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 기간에 진행된 77개 집단상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배격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이 발표되었다”고 덧붙였다.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2016. 9. 29.

■ 북한, 처음으로 1인당 GDP 1천 달러 넘겨(연합뉴스)

-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천 달러를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북한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추정하는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여서 1년 단위의 정확한 북한 GDP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임.
-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자체 추정한 북한의 지난해 1인당 명목 GDP 값은 1천13달러로 2014년(930달러)보다 증가함.
- 이 추정 모델값을 볼 때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1천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9. 24.

■ 대북제재에도 中 8월 북한산 석탄 수입 27% 증가 반전(연합뉴스)

- 올해 3월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금지 대상이 된 북한산 석탄의 올해 8월 중국 수입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27.5% 증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의 양은 올해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7월까지의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8월에 이처럼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중국 세관총서의 통계를 토대로 한 경제조사회사 CEIC의 자료에서 드러남.

2016. 9. 27.

■ 中서 반나절 북한관광상품 ‘불티’...두달여만에 1만6천명 이용(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판매되는 반나절 일정의 북한관광상품을 이용한 중국인이 두달여만에 1만6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27일 선양(瀋陽)에서 발간되는 랴오닝신문에 따르면 단둥 중국국제여행사는 지난 7월9일부터 판매한 ‘조선(북한) 신의주 반나절관광’ 상품으로 70여 일 만에 1만6천여명을

끌어 모았음.

- 라오닝신문은 “조선(북한) 관광상품 판매가 잘 되면서 단동의 여타 관광명소 방문객수도 작년 대비 평균 30% 늘어났다”며 “특히 북한관광과 밀접한 압록강 단교(斷橋)의 경우 작년보다 50% 정도 방문객이 늘었다”고 전함.

2016. 9. 28.

■ **중독자제재 가속에 단동 북중무역 칼바람…홍상폐쇄·선박억류(연합뉴스)**

- 북한의 핵 개발에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라오닝(遼寧) 홍상(鴻祥)그룹의 핵심 계열사 단동 홍상실업발전이 폐쇄되고 대북 운송 선박 운영도 금지되는 등 중국 정부의 독자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홍상그룹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됨.
- 또한, 이런 노력에도 미국이 대북 관련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직접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음.

2016. 9. 29.

■ **中 단동 홍상 대북 핵물자 수송루트는 압록강 밀무역(연합뉴스)**

- 중국 라오닝(遼寧)성 단동(丹東)의 라오닝 홍상그룹이 북한에 핵물자를 수출할 때 압록강 밀무역 경로를 활용했던 것으로 전해짐.
- 홍상이 외부 감시가 소홀한 시 외곽이 아니라 도심 부근에서 버젓이 밀무역을 한 것으로 볼때 공안 등 당국과 유착설도 나옴.
- 29일 북중접경의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홍상그룹은 최근 수년동안 단동 진싱(振興)구의 신도시 랑터우(浪頭)에서 선박을 이용해 북한으로 핵 개발 관련 물자를 몰래 들여간 것으로 전해짐.

2016. 9. 30.

■ **두만강 일대 홍수 이후 북중교역 차질…세관피해로 통관 중단(연합뉴스)**

- 최근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일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북중접경 교역 관련 시설이 큰 피해를 봐 당분간 북중교역이 차질을 빚게 됨.
- 30일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달 초 태풍 ‘라이언록’ 영향으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의 세관 시설이 모두 급류에 잠기거나 휩쓸렸음.

- 지난달 29일~이달 1일 사이 지린성 연변자치주에는 옌지(延吉) 174.2mm 등 평균 102.8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두만강 유량이 초당 4천400여m³로 독 아래 30cm까지 차오르는 등 지난 10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위를 기록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9. 27.

■ 北, 중국 휴대전화 이용한 對한국 교신 엄벌(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한국 측과 교신하는 주민을 단속하기 위해 일부 중국산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북전문매체 뉴포커스가 27일 보도함.
- 이 매체의 북한 내부 통신원은 “요즘 들어 북한 정권은 9년 전 출시된 107막대기 폰(스탠드형)을 사용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기를 소유한 주민은 당 위원회에 가져다 바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만약 이를 어기고 사용한 경우 남한과 통화한 것으로 보고 엄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요즘 들어 홍수로 온성에서 수천 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외부로 나가자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며 “하지만 전국에 널리 퍼져 있는 107막대기 휴대전화를 100% 몰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9. 26.

■ 北 “미국에 승리…美, 대북정책 재검토해야”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핵무기 개발을 통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미국에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꿀 것을 거듭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는 조미대결에서 또 다시 승리하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한다며 “대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주장함.
- 북한이 이처럼 ‘승리’를 거듭 주장하는 것은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 무용론을 내세워 제재 대오에 균열을 유도하고 추후 대미 협상력도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2016. 9. 27.

■ 北, 美핵위협 기증되면 우리 핵철퇴 천백배 될 것(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미국을 ‘핵범죄국가’라고 거칠게 비난하면서 “미국의 핵위협 공갈이 기증되면 우리의 핵철퇴는 천백배로 역세여질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원고지 약 84매 분량의 비망록에서 “미국이야말로 악마의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인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고 불태우며 강탈하는 인류 공동의 원수, 포악무도한 행성의 파괴자”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연구소는 아울러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방문한 것은 일본의 군국화 광증을 고취해주는 동시에 핵폭탄을 이용한 70여년 전의 생체 실험이 오늘날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현지에서 검증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는 궤변을 펼치기도 함.

■ 美재무부, 北핵개발 지원 중단등홍상 직접 제재…중기업은 처음(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홍상실업발전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초강력 제재를 가함.
- 미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라오닝홍상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홍상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홍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함. 함께 제재 리스트에 오른 이들 중국인은 단둥홍상의 제너럴 매니저

- 인 저우젠수, 부(副) 제너럴 매니저인 홍진화와 재무책임자 뤼관쉬임.
-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美, 북한 등 적대국 기습 핵공격 대비해 핵전력 현대화 추진(연합뉴스)

-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예상치 못한 핵 공격에 대비해 차세대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함.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노후 핵무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핵무기 제조를 포함해 핵전력 현대화에 1천80억 달러(119조 7천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을 밝힘.
-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후 첫 핵전력 관련 연설을 통해 막대한 예산 문제를 제기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어떤 핵전력이라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겠다고 핵전력 현대화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힘.

2016. 9. 28.

■ 백악관, 한반도비핵화 위해 제재 바탕 외교 노력 경주(연합뉴스)

- 미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가려 시도하고 있음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통해 재확인됨.
- 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 “성공적이지 않았던데 따른 좌절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 보유가 용납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힘.
- 프스탈 국장과 이날 CSIS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포괄적핵실험금지(CTBT)조약에 따른 국제적 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사례로 이 감시체제에 의해 전 세계에 설치된 관측시설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함.

■ 美 하원, 북한에 현금·금 지급금지 법안 채택(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공화당 소속 손 더피 의원(위스콘신)의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고 VOA는 전함.

- 아울러 법안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억류국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VOA는 전함.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워비어 등 2명임.

■ 러셀, 국제금융망서 北배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다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의 국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함.
-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손 더피 의원(공화 위스콘신)의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됨.

■ 백악관, 北핵개발 지원 중소기업 단등홍상 제재는 “오바마의 의지”(연합뉴스)

-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을 미국 정부가 독자 제재한 데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미 백악관이 밝힘.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 “북한 정권을 추가로 고립시키고 그들(북한 정권)을 도우려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관에 압박을 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별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점은 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배치를 한국과 협의했는지를 말해준다”고 밝힘.

■ 美, 국제금융망서 北배제 협정 추진…석탄 등 자금줄 차단(연합뉴스)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다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석탄 수출과 북한 근로자의 국외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입원 차단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등과 연계해 금융 압박에도 나선다고 밝힘.

-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손더피 의원(공화 위스콘신)의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됨.

2016. 9. 29.

■ **美, 北관련 홍상외에 중기업 추가조사·北고려항공 조사도 시사(연합뉴스)**

- 미국 당국자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과 관련, 단둥홍상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함.
- 대니얼 프라이드 미 국무부의 제재담당 조정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홍상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논쟁하지 않겠다”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음.
- 미 정부는 고려항공이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하고 외국 노동자들의 불법 자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美정부, 각국에 北과의 외교-경제관계 단절·격하 공식 요청(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함.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말함.

■ **美국무, TPP 비준 거부 되면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지 않을것(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약화로 인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월슨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중국과 북한은 TPP 비준 거부를 미국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남은 임기 내 핵심 어젠다로 TPP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도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미 언론은 보고 있음.

■ 러셀 미차관보 “미얀마 군부 일각 여전히 북한과 협력” 우려(연합뉴스)

-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속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에는 여전히 북한과 협력하는 세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AP통신이 29일 보도함.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날(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군부 독재가 끝난 지 5년이 더 지났지만 버마 군부 내에는 아직도 (북한과) 상호작용을 하는 잔재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 소위원장은 수치 자문역이 의원들을 만나 미얀마 코퍼레이션과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등 군부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유지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 北, 美 B-1B 한반도 출동에 “미제의 허세”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미군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최근 한반도로 출동시킨 것에 대해 ‘허세’라고 비꼬았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B-1B 따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놀래워보려는 미제의 허세도 가궁스럽다(불쌍하다)”며 “미국의 핵만능론은 거덜이 난 지 오래”라고 말함.
- 앞서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B-1B 2대를 지난 21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함. 2대의 B-1B는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MDL)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경기도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 상공을 거쳐 오산기지에 도착함.

2016. 9. 30.

■ 美, 北 국제금융망 접근 봉쇄...SWIFT까지 겨냥 초강경 법안 발의(연합뉴스)

-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섬.

- 미 정부가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 하원은 아예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함.
- 한편, 이 법안은 전문가들이 지난 2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100만 달러가 빠져나간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았음.

나. 북·중 관계

2016. 9. 25.

■ 북중접경지에 새 교량 건설중...양국 협력사업 여전(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고 있는 등 대북 제재 국면에도 북중 협력사업은 여전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3월 19일 촬영된 북한 나선시 선봉지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중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에서 '민생 목적'에 관한 부분은 예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양국간 거래와 사업, 공사 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RFA는 전함.

■ 중국 매체, 김정은 강력 비난...“스스로 멸망 앞당겨”(연합뉴스)

- 중국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현재와 같은 책동을 계속하면 중국의 대북 제재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섬.
- 특히 이런 기사가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 주요 기사로 올라와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를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25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바이두의 휴대전화 뉴스 면에서 푸커군사(福客軍事) 등 군사 전문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주요 뉴스로 한동안 떠 있다가 사라짐.

■ 중국 홍상 관련 北기업인들 조사...광선은행 포함된듯(연합뉴스)

-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 랴오닝(遼寧) 홍상(鴻祥)그룹과 관련한 중국 주재 북한 기업인들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가운데는 홍상그룹 계열사의 대주주인 북한 조선광선은행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사임.
- 25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에 우리늄 등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전략 물자를 몰래 수출한 의혹을 받는 홍상그룹과 이 회사의 대표 마샤오홍을 체포한 데 이어 관련된 북한인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6. 9. 28.

■ **마샤오홍, 세관당국에 뇌물주고 대북수출…中도 유착관계 조사(연합뉴스)**

- 북한의 핵 개발 연계 혐의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는 라오닝홍상그룹의 마샤오홍(馬曉紅) 총재가 “중국 세관당국에 뇌물을 보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를 대부분 자유롭게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함.
- 신문은 마 총재를 알던 라오닝성 북중무역 관계자를 인용, “마 총재가 북중무역을 관리하는 세관당국 담당자에게 금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이 전함.
-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북중무역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홍상그룹과는 별도로 단둥(丹東) 소재 10개 무역회사에 대해서도 대북 불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함.

2016. 9. 29.

■ **北 “中 정부,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용 물자 기증”(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함경북도 홍수 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물품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의 함북도 북부 지역이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지원 물자들을 무상 기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이에 앞서 중국홍십자회(적십자사)와 주조 중국대사관에서도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임.

다. 북·일 관계

2016. 9. 26.

■ **日국회, 대북 독자제재 강화해야…北핵실험 규탄결의문 채택(연합뉴스)**

-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26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며 “대북 독자 제재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앞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의결해 본회의에 넘김

라. 북·러 관계

2016. 9. 24.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북한, 핵 프로그램 포기하라”(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북한에 촉구함.
- 라브로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함.
-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모든 당사자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6. 9. 30.

■ 러시아, 강력한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지지(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측 수석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힘.
- 김 본부장은 “한-러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더욱 강력한 신규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와 관련 러시아 측은 안보리 추가 결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9. 24.

■ 北조평통 “반기문, 제재 가담시 대가 값비싸게 치를 것” 비난(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발언을 거듭 내놓은 것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거칠게 비난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발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반기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전적으로 추종하면서 유엔을 그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순한 정치 무대로 악용해온 대결광신자”라며 이같이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그가 정략적 타산만을 앞세워 박근혜 친미보수 패당과 배짱을 맞추고 우리에게 대한 제재늘음에 계속 가담하며 못되게 놀아댄다면 그 대가를 값비싸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위협함.

■ 안보리, 핵실험금지 결의안 채택...8개국에 CTBT 비준 촉구(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핵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채택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의 발효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2016. 9. 26.

■ IAEA 총회 개막...북핵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연합뉴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168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함.
-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과 핵무기, 원자로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과 함께 북한 핵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됨.
- 아미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검증이 이제 시작됐지만, 북한은 올해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북한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함.

2016. 9. 28.

■ **英, 제재대상 北 국영보험사 런던지사 추방(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제재대상 기관에 올린 북한 국영보험사 영국지사에서 일한 직원 2명에 대해 비자 연장을 거부해 사실상 추방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소식통은 27일(현지시간) “기관이 제재대상에 오르면 거기서 일한 직원에 비자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제재 이행일 것”이라고 말함.
- 영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평양본사와 런던지사를 예금 등 모든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등의 조치가 따르는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함.

■ **벨라루스 외무부, 北대사관 공식 개설 안됐다…대사 부임 안해(연합뉴스)**

- 옛 소련국가인 벨라루스에 북한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벨라루스 외무부가 27일(현지시간) 확인함.
- 벨라루스 외무부 대변인 드미트리 미론칙은 27일(현지시간) 자국 외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북한 측의 대사관 개설주장과 관련 이같이 밝힘.
- 미론칙은 “벨라루스에 제대로 활동하는 북한 대사관은 없다”면서 “대사가 공식 부임하지 않았으며 아그레망(사전 부임 승인) 요청도 오지 않았다”고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9. 25.

■ **전직 CIA국장, 북한 핵미사일 3~5년 내 미국 사정권(연합뉴스)**

-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3~5년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워싱턴주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함.
- 그는 25일 자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함.
- 헤이든 전 국장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의 핵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이 가능했다”면서도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함.

2016. 9. 26.

■ **美, 北 ICBM 위협 대응 내년 초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실험(연합뉴스)**

- 미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대응,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GBI)로 요격하는 실험을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와 이를 탑재하는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타격 위협을 계속하는 상황을 고려, 미 국방부가 내년 1분기(1~3월) 중에 잠정적으로 GBI 발사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전함.
-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지난 20일 ICBM 개발을 목적으로 로켓 엔진시험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모양과 발사대가 흡사해, 두 나라가 미사일과 위성 발사대를 공동 개발하면서, 상세한 디자인 자료와 테스트 원형을 교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9.25	한미 10월 중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확장억제 못박기(연합뉴스)	
	9.26	한미 軍, 北 가까운 동해서 지상목표물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한미, 軍 항공기 성능 인증 공유...군사동맹 강화(연합뉴스)	
	9.27	정부, 美 단동홍상 제재에 “대북거래 경각심 고취 기대”(연합뉴스)	
	9.28	미국방, 北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반격...韓日과 확장억제 협의(연합뉴스)	
러셀 미차관보, 사드 한국배치 속도 가속...가능한한 빨리 배치(연합뉴스)			
9.30		미국방, 아태 군사력우위 강력추진...韓日등과 사이버전력 강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중국, 사드 배치 장소 확정에 “결연히 반대” 반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9.24	북한 대응 강력히 연대...도쿄 문화교류행사서 한일협력 강조(연합뉴스)	
	9.25		日,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도심 상설전 내년 검토(연합뉴스)
	9.26		요미우리 “日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초 개최 타진”(연합뉴스)
		아베, 한국에 “미래지향 상호신뢰” 추가, 중국 “우호관계” 삭제(연합뉴스)	
9.30		日외무상, 위안부 ‘추가적 조치 합의된 것 없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9.27		美·中 대북 제재 힘겨루기...중국, 미국의 홍상 제재에 불만(연합뉴스)
	9.29	러셀 美차관보 “中, 한·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 매우 신경 써”(연합뉴스) “북한산 석탄 수입말라”vs“안보리결의 위반아냐”...美中 힘겨루기(연합뉴스)	
	9.30	美 ‘강대국간 경쟁’ 표현 금지 지시, 中과 긴장완화 포석(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9.28	미일, 北미사일 대비 공동개발 해상요격미사일 내달 발사시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9.24	미·러 외무 ‘시리아휴전’ 재개 합의못해...케리, 일부 진전(연합뉴스)	
	9.30	미국·러시아, 시리아 휴전 무산 싸고 책임 공방 치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9.26	中당지쉬안 前국무위원·日연립여당대표 회담...관계개선 노력(연합뉴스)	
	9.29	중일 4년만에 테러대책협의 재개...국제테러정보 공유(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9.28		러시아, 남중국해 문제 놓고 中과 이견 조짐(연합뉴스)
	9.29	韓·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앞서 中·러 북핵 협상(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9.25	러시아, 대일 경제협력 전담 정부 대표 직 신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9. 25.

■ 한미 10월 중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확장억제’ 못박기(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0월 중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對) 한국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t) 공약을 보다 확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 후속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공약이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2016. 9. 26.

■ 한미 軍, 北 가까운 동해서 지상목표물 정밀타격훈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해군은 26일 동해에서 적 지상목표물을 가상 타격하는 실제 작전 수준의 정밀 타격훈련을 실시함.
- 이번 훈련에는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울곡이이함(7천600t급) 등 수상함 3척과 1천200t급 잠수함 1척, 대잠헬기(링스)와 해상초계기(P-3) 각 1대, 미국 측에서는 알레이 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스프루언스함(9천500t급), 해상초계기(P-3)가 참가했다고 해군은 전함.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이 발휘할 광범위한 능력의 일부일 뿐”이라며 북한을 압박하는 추가 군사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함.

■ 한미, 軍 항공기 성능 인증 공유...군사동맹 강화(연합뉴스)

- 국내 군용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인증을 미군 당국이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정하는 길이 열림.
- 방위사업청은 26일 오후 오원진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 소장)과 미 육군 항공기술국

장이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힘.

- 오원진 국장은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대한민국 감항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한미 감항 인증 협력이 활성화돼 군사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2016. 9. 27.

■ **정부, 美 단동홍상 제재에 “대북거래 경각심 고취 기대”(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 정부가 북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 단동홍상 산업개발공사를 26일(현지시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미국이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중국의 단동홍상산업개발공사 및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해당 조치는 최근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함.

2016. 9. 28.

■ **미국방, 北 핵무기 사용시 압도적 반격…韓日과 확장억제 협의(연합뉴스)**

-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핵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함.
-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전날 노스다코타 주의 한 핵미사일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연설하며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함을 웅변한다”며 “따라서 우리의 억지력은 믿을만 하고 그 지역(동북아) 동맹국들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함.
- 카터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을 ‘핵도발 가능성’이 있는 두 나라로 지목한 뒤, “오늘날 분명한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과거 냉전형의 핵무기 대량교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러시아나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적(미국)을 압박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물러서거나 동맹국을 포기토록 하려는, 작지만 여전히 전례 없이 끔찍한 공격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러셀 美차관보, 사드 한국배치 속도 가속…가능한한 빨리 배치(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함.
 - 2014년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에 의해 현재 미국을 경유해 군사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을 통해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됨.

2016. 9. 30.

■ **미국방, 아태 군사력우위 강력추진…韓日등과 사이버전력 강화(연합뉴스)**

- 미국은 사이버·무인 잠수정(수중 드론) 등 새로운 전력 개발과 미군의 배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우위 유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29일(현지시간) 밝힘.
- 월스트리트 저널(WSJ) 디펜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미국이 수중 드론, 미사일 성능 개량 및 신형 어뢰 개발과 사이버전 수행 능력 개선 등 새로운 분야의 전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의 다음 단계(next phase) 진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함.
- 앞서 지난 4월에도 카터 장관은 아태 지역 배치 미군 병력 증강,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정찰기, 신형 상륙강습함 아메리카 함 등 최신훈 장비 배치 확대와 B-2, B-52H 등 전략폭격기 지속 배치 등을 통해 “미국의 가장 우수한 병력과 장비를 아태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나. 한·중 관계

2016. 9. 30.

■ **중국, 사드 배치 장소 확정에 “결연히 반대” 반발(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이 30일 성주골프장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이는 기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날 중국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 또한 강력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에 작지 않은 과장이 예상된다.

- 경황(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사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유관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돕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함.

다. 한·일 관계

2016. 9. 24.

■ 북한 대응 강력히 연대…도쿄 문화교류행사서 한일협력 강조(연합뉴스)

-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한 가운데 일본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행사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연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 24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열린 제8회 '한일 축제한마당'에 참석한 한일 양국 정치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성과로 거론하고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내놓음.
-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는 새누리당 정갑윤·지상욱·이만희·김정재·임이자 의원과 이준규 주일한국대사, 한일축제한마당 한국 측 실행위원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참석함. 일본 측에서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회장,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중의원,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가이에다 만리(海江田万里) 전 민주당(현 민진당) 대표, 하쿠 신쿤(白眞勳) 민진당 의원 등이 참석함.

2016. 9. 25.

■ 日,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도심 상설전’ 내년 검토(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내년 도쿄 도심에서 상설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 상설전은 “영토 주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반환이나 보전에 대한 대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함.
-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은 이와 관련,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국민에게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료는 그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자주 제기했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2016. 9. 26.

■ **요미우리 “日정부, 한일중 정상회의 12월 초 개최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12월 초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6일 보도함.
- 신문은 한국은 이에 응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측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국 정부는 답변을 보류하고 있어 조율에 난항도 예상된다고 전망함.
-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소집된 임시국회 회기가 11월 30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도쿄에서 개최할 3국 정상회의를 12월 초에 개최하는 것을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아베, 한국에 “미래지향 상호신뢰” 추가, 중국 “우호관계” 삭제(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6일 국회 연설에는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순탄하지 않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투영됨.
- 아베 총리는 이날 임시 국회 개원을 계기로 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하며 한국에 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함.
-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연설에서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환영한다. 지역의 평화와 번영, 세계 경제에 큰 책임감을 지닌 것을 함께 자각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원칙 아래 대국적 관점에서 관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또 당시에는 양국 관계에 대해 “안정적인 우호 관계”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삭제됨.

2016. 9. 30.

■ **日외무상, 위안부 ‘추가적 조치’ 합의된 것 없다(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30일 한국 정부가 전날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함.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정부간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합의된 것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은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명의로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9. 27.

- **美·中 대북 제재 힘겨루기…중국, 미국의 흉상 제재에 불만(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놓고 힘겨루기 국면에 돌입함.
- 중국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법에 따라 중국 기업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강행했기 때문임.
-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짐.

2016. 9. 29.

- **러셀 美차관보 “中, 한·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 매우 신경 써”(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중국이 한·일 양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언급함.
- 그는 “중국은 현재 한국이나 일본이 혹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할 위험성에 대해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중국이 대북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 고 전망함.
- 러셀 차관보는 이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면서 “미국이 현재 취하는, 그리고 앞으로 동맹과 협력해 취할 행동은 모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산 석탄 수입말라”vs“안보리결의 위반아냐”…美·中 힘겨루기(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 양상임.
-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는

- 한편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대중 압박을 계속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하면서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에 어긋나지 않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음.

2016. 9. 30.

■ **美 ‘강대국간 경쟁’ 표현 금지 지시, 中과 긴장완화 포석(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이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해 ‘강대국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자국 국방부에 지시한 것을 두고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으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 한다는 관측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옴.
- 3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군사전문매체 네이비 타임스와 밀리터리 타임스 등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최근 국방부 고위층에 ‘강대국 경쟁’이라는 표현이 양국 관계를 충돌 국면으로 잘못 규정하는 것이라며 덜 선동적인 표현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함 건조와 인공섬 건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 영유권 강화 등이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며 NSC의 지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나. 미·일 관계

2016. 9. 28.

■ **미일, 北미사일 대비 공동개발 해상요격미사일 내달 발사시험(연합뉴스)**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10월 하와이 인근에서 실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함.
- 시험 발사될 요격 미사일은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 미사일 ‘SM3블록1A’의 개량형인 ‘SM3블록2A’임.
- 아사히는 10월 발사 시험이 개발 최종단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며, 이번을 포함해 올해 안에 2회 모두 시험에 성공하면 내년 이후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함. 그러나 생산 공정이 까다로워 실제 일본에 인도되는 시기는 5년 후인 2021년으로 전망됨.

다. 미·러 관계

2016. 9. 24.

■ 미·러 외무 ‘시리아휴전’ 재개 합의못해…케리, 일부 진전(연합뉴스)

- 존 케리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동해 휴전협정 재개 등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함.
- 케리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났다”면서 “우리는 일부 아이디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고 일부 진전을 거뒀다”고 말함.
-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건설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9. 30.

■ 미국-러시아, 시리아 휴전 무산 싸고 책임 공방 치열(연합뉴스)

- 시리아 사태 악화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러시아 양국 간 외교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음.
- 미국이 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로 시리아 휴전 합의가 깨졌다며 앞으로 러시아와의 공조를 포기할 수도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역공세를 펴.
- 국제사회는 시리아 휴전에 관한 미·러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시리아 알레포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반군 간에 치열한 교전이 재개되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라. 중·일 관계

2016. 9. 26.

■ 中탕자쉬안 前국무위원·日연립여당대표 회담…관계개선 노력(연합뉴스)

-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지낸 탕자쉬안(唐家璇) 중일우호협회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 아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회담함.
-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탕 회장과 아마구치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회담하며 중일 관계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탕 회장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관해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로 밀려 되돌아가 버리는 긴요한 시기에 있다”고 언급함. 아마구치 대표는 “일본과 중국은 힘을 모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중국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려고 양국 방위 당국 간에 ‘해상연락 메커니즘’을 연내에 개시하기로 한 것이나 가스전 공동 개발에 관한 교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함.

2016. 9. 29.

■ **중일 4년만에 테러대책협의 재개...국제테러정보 공유(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는 28일 도쿄 외무성에서 실무급 테러대책협의를 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 국제테러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함.
- 외무성에 따르면 양국은 또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테러 대처 능력 강화 지원에도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음.
- 중일 테러대책협회는 2011년 1월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이 세번째임.

마. 중·러 관계

2016. 9. 28.

■ **러시아, 남중국해 문제 놓고 中과 이견 조짐(연합뉴스)**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내 역할확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해온 미국에 맞서 최근 유례없이 협력관계를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남중국해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음.
- 동남아 문제 전문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부설 국방대학원의 칼리일 테이어 교수는 호주전략정책연구원(ASPI) 기관지 스트래티지스트 최신희 기고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인 미국에 맞서 경제와 군사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남중국해 정책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만만찮아 자칫 충돌 가능성까지 있다고 진단함.
- 러시아와 중국은 그러나 한국과 유럽에 미국이 배치를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체계 등 안보와 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봄.

2016. 9. 29.

■ **韓·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앞서 中·러 북핵 협상(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차관급 회동을 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우려를 표시함.

- 29일 관영 타스통신과 신화통신에 따르면 쿵위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도 양측이 확인했다고 외무부는 밝혔다.

바. 일·러 관계

2016. 9. 25.

■ 러시아, 대일 경제협력 전담 정부 대표직 신설(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대표직을 신설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크렘린궁 사이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달 초 개최됐던 제2차 '동방경제포럼' 결과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정부에 하달하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전담할 대표직을 신설하도록 지시함.
- 푸틴은 새로운 직책을 다음 달 15일까지 만들고 신설 대표직의 권한을 명시하도록 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9.24	뉴욕에서 北정보통제 고발...정보유입을 가장 큰 범죄로 다뤄(연합뉴스)
	9.25	EU "北 인권유린 우려...北 인권개선, EU 대북정책 중심"(연합뉴스) 16년째 北인권 지킴이 멕시코인...中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하라(연합뉴스)
	9.26	뉴질랜드 평통, 북한 인권 사진전·다큐 시사회 개최(연합뉴스)
	9.27	'北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총회 결의안' 3년연속 추진(연합뉴스)
	9.29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건설 현장서 추락사 잇따라(연합뉴스)
	9.29	캐나다 북한인권단체, 의회 내 북한인권법 재추진 움직임(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9.30	미 하원, 미국인 납북 재조사 촉구 결의 채택(자유아시아방송)
	9.26	北, 국경 수해지에 보위부 검열단 파견(연합뉴스)
	9.29	北, 14호 정치범 수용소 확장중...사격장 새로 설치(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9.30	北, 평남 18호 정치범 수용소 운영재개 정황(연합뉴스)
	9.26	북한인권기록센터 28일 현판식...北 인권 조사업무 시작(연합뉴스)
	9.27	이산가족 민간교류경비 지원 급감...現정부 4년간 1억원(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9.28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北 인권조사 본격화(연합뉴스)
	9.27	북한 납과간첩 최근 5년 간 13명...12명 '탈북자' 위장(미국의소리)
	9.28	탈북 수학영재, 24일 홍콩 떠나 한국 도착...19년만에 처음(연합뉴스)
대북지원	9.28	이산가족 평균 연령 80세 넘어...이산상봉 행사는 난망(연합뉴스)
	9.29	북한군 병사 1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연합뉴스)
	9.26	킹 특사 "미, 북 홍수피해 지원계획 없어"(자유아시아방송)
	9.27	유니세프 "北수해지역 학교, 지붕 벽 없는 교실서 수업"(연합뉴스)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라면·밀가루 지원...정부, 부적절(연합뉴스)
		통일부, 2016 회계연도 北 식량 부족량 70만 톤 육박(연합뉴스)
	9.27	남한 민간단체, 북에 구호물품 첫 전달(자유아시아방송)
9.29	WFP, 북한 9월 배급량 300g...유엔 권장량 절반(연합뉴스)	
9.29	유엔, 대북 홍수구호자금 목표액 10%도 확보 못해(자유아시아방송)	
9.30	유엔, 北 수해복구에 410만 달러 지원 결정(연합뉴스)	
	9.30	북한 수재민 지원 시급...한국교회도 동참해주길(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9. 24.

■ 뉴욕에서 北정보통제 고발…정보유입을 가장 큰 범죄로 다뤄(연합뉴스)

- 북한이 정보통제를 통해 인권을 어떻게 탄압하는지를 고발하는 행사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림.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중심의 와튼 포럼에서 탈북자 출신 작가와 대학생 등을 초청해 북한의 정보통제 실상을 들었음.
- 이날 행사는 북한 정부가 외부의 정보통제를 강화해 기본적인 알 권리조차 탄압하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열림.

2016. 9. 25.

■ EU “北 인권유린 우려…北 인권개선, EU 대북정책 중심”(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개선은 EU 대북정책의 중심이라고 밝힘.
- EU는 최근 발간한 ‘2015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북한 당국에 주민 인권개선을 촉구함.
- EU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주요포럼에 참여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활동에 관여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함.

■ 16년째 北인권 지킴이 멕시코인…中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하라(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테레사 오스트(여·42) 멕시코 지부 대표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하고 유엔, 한국과 협력해 탈북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함.
- 오스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억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중국 당국에 붙잡혀 강제송환된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거나 즉결 처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한국과 다른 많은 국가가 탈북자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은 많은 탈북자가 배고

품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해 탈북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16. 9. 26.

■ 뉴질랜드 평통, 북한 인권 사진전·다큐 시사회 개최(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회장 도연태)는 26일 오클랜드 시내에서 북한 인권 사진 전시회와 북한 실상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열었음.
-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AUT 대학 건물에서 ‘암흑과 절망의 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진 전시회에는 요덕 정치범 수용소 인공위성 사진을 비롯해 탈북자가 벌목 노동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노예나 다름없는 세상’이라는 그림 등 50여 점이 전시돼 많은 관심을 끌었음.
- 또 러시아 출신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만든 ‘태양 아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진미’라는 어린 소녀가 소년단에 가입하고 김일성·김정일 생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찍으면서 북한 당국의 눈에 거슬릴 수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가공되지 않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 민주평통 뉴질랜드협의회는 이날 사진 전시회와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함.

2016. 9. 27.

■ ‘北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유엔총회 결의안’ 3년연속 추진(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로 3년 연속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마련한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인권 ICC 회부’를 담은 결의안이 올해도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는 10월말 추진돼 왔다”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함.
- 킹 특사는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희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정도 후에 결의안 초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함.

■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 건설 현장서 추락사 잇따라(연합뉴스)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사고로 잇따라 숨지고 있음.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 인터넷 신문 ‘폰탄카’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께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 비보르그스크 지역 파르골로보 마을의 주택 건설 현장에서 48세 북한인 남성이 추락사함.
- 국내 북한 근로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3명의 북한 근로자가 사망함. 북한 근로자들의 잦은 사망 사고는 현지 건설업체들의 안전 규정 위반이나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무리한 작업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에는 현재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수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전역에 약 3만 명의 북한인 근로자가 파견돼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6. 9. 29.

■ 캐나다 북한인권단체, 의회 내 북한인권법 재추진 움직임(미국의소리)

- 캐나다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11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캐나다 대북단체 ‘북한인권협의회’가 밝힘.
- 이 단체의 이경복 회장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2일 하원 인권소위원회의 세릴 하드캐슬 부위원장과 데이비드 스위트 부위원장, 브래드 트로스트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말함.
- 앞서 지난 해 6월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의 어윈 커틀러 의원이 사상 처음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었지만, 뒤이은 의회 총선거 일정 때문에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음.

■ 미 하원, 미국인 납북 재조사 촉구 결의 채택(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하원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10여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넬튼 실종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H. Res. 891)를 채택함.
- 결의는 특히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에서 여행중 갑자기 실종된 스넬튼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조사토록 함.
- 미국이 제재 강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국인 납치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북한 정권의 국제규범을 무시한 행태가 또 도마에 올랐음.

2016. 9. 30.

■ EU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일본과 올해도 추진”(미국의소리)

-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매튜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낀.
-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9. 26.

■ 北, 국경 수해지에 보위부 검열단 파견(연합뉴스)

- 북한이 수해를 입은 국경 지역에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 RFA는 “국경경비대 초소와 철조망 등 국경통제시설이 파괴돼 주민들의 탈북이 용이해졌다”며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 우려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양강도를 비롯한 국경의 전 지역에 보위부 검열단이 내려와 거미줄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벌써 여러 세대가 보위부 단속에 걸려 체포되면서 주위가 온통 얼어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2016. 9. 29.

■ 北, 14호 정치범 수용소 확장중...사격장 새로 설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평안남도 개천군에 있는 ‘14호 정치범 수용소’에 최근 사격장과 양식장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맬빈 연구원은 RFA에 출연, 지난 3월 30일 촬영된 14호 수용소 주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힘.
- 맬빈 연구원은 “수용소 본부건물 옆에 새로 만든 사격장은 약 270m 길이에 바닥에

그런 목표물도 (위성 사진상) 뚜렷하게 보인다”면서 “이렇게 새로 지은 사격장은 모두 3곳으로 북한 군인이 이곳에서 사격 훈련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2016. 9. 30.

■ **北, 평남 18호 정치범 수용소 운영재개 상황(연합뉴스)**

- 북한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평안남도 북창군의 ‘18호 수용소’ 운영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RFA에 지난 3월 30일 촬영된 18호 정치범 수용소 자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힘.
- RFA는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함경북도 명간의 16호, 함경북도 청진의 25호 등이지만, 위성사진의 분석에 따르면 6개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9. 26.

■ **북한인권기록센터 28일 현판식…北 인권 조사업무 시작(연합뉴스)**

- 통일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을 열고 북한 인권 조사, 기록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힘.
- 현판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임.
- 서두현 초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은 “정부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2016. 9. 27.

■ **이산가족 민간교류경비 지원 급감…現정부 4년간 1억원(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들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이산가

족 민간교류 경비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17억1천600만원(1천410건)에 달했던 이산가족 민간교류 지원금(지원건수)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현재까지 1억100만원(5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북한의 내부 통제가 심해지면서 민간교류경비 지원 신청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2016. 9. 28.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北 인권조사 본격화(연합뉴스)

-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이날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인권모략의 도발적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의 거둬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북인권법’ 시행놀음에 한사코 매달리는 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쟁발발국면으로 거침없이 치닫고 있다”고 역지를 부림.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9. 27.

■ 북한 남파간첩 최근 5년 간 13명…12명 ‘탈북자’ 위장(미국의소리)

- 한국 군의 정보와 동향 등을 캐내기 위해 북한이 최근 5년 간 남파한 간첩 13명 가운데 이른바 ‘탈북자 위장 간첩’이 대부분인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아 오늘(27일) 공개한 ‘북한의 침투와 국지 도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군 관련 등 고위 정보를 빼내기 위해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6명의 탈북자 위장 간첩을 남파하는 등 수 년 동안 꾸준히 공작을 펼쳐왔음.
- 이 가운데 지난 2013년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잠입한 북한 보위부 출신 직과 간첩 A씨는 군사정보 등을 빼내려 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고, 2014년 탈북자 위장 간첩으로 구속 기소된 B씨도 지난해 실형이 선고됨.

2016. 9. 28.

■ **탈북 수학영재, 24일 홍콩 떠나 한국 도착...19년만에 처음(연합뉴스)**

- 지난 7월 중순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 학생이 이달 24일 홍콩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 제57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해 7월 6일부터 홍콩에 머물던 북한 수학영재 리정열(18)군이 같은 달 16일 저녁 사라진 뒤 홍콩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홍콩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28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리 군은 지난 24일 홍콩을 떠나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함. 리 군에 홍콩에 도착한 지 약 80일만, 홍콩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지 약 70일 만임.

■ **이산가족 평균 연령 80세 넘어...이산상봉 행사는 난망(연합뉴스)**

- 남측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올해 들어 80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 2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남측 가족 13만874명 가운데 51.3%인 6만7천1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초고령자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시급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함.

2016. 9. 29.

■ **북한군 병사 1명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연합뉴스)**

- 북한군 병사 1명이 2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군에 귀순함.
-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께 북한군 병사 1명이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해왔다”고 밝힘.
-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남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북간 총격전과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5. 대북지원

2016. 9. 26.

■ 킹 특사 “미, 북 홍수피해 지원계획 없어”(자유아시아방송)

- 킹 특사는 26일 미국 워싱턴 DC 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SAIS)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정부가 미국 정부에 수해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것임.
- 다만 킹 특사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홍수피해 지원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킹 특사는 한국 정부 등과 협력해 국제 사회에 북한 노동력 활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최대 노동력 수출국이 중국과 러시아란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함. 한편 킹 특사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함.

2016. 9. 27.

■ 유니세프 “北수해지역 학교, 지붕·벽 없는 교실서 수업”(연합뉴스)

- “이제 곧 겨울이 들이닥칠 텐데 지붕도 벽도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 북한 함경북도 연사군 광양고등중학교 리선철 교장은 홍수피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유엔 아동기금(UNICEF) 오윤사이칸 텐데브노로프 특사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리선철 교장은 “댐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방류되면서 산사태가 났다”며 “교실과 실내 체육관 등 학교 주요건물들이 부서졌다”고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김점철 씨는 “지금까지 연사군의 사망자 수는 81명인데 이 가운데 26명이 어린이”라며 “실종자는 어린이 8명을 포함해 모두 25명”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텐데브노로프 특사가 방문한 연사군은 무산군과 함께 이번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며, 도로와 교량이 끊겨 상당 기간 접근이 어려웠던 곳으로 전해짐.

■ 민간단체, 北 수해지역에 라면·밀가루 지원…정부, 부적절(연합뉴스)

-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았는데도 국내 대북지원단체가 해외동포단체를 통해 수해가 발생한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라면과 밀가루 등을 지원한 것으로 27일 알려짐.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은 이날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북 함경북도 지역 수해지원 긴급 모금 2차 소식’을 통해 “이번 북한의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함경북

도 지역에 지난 9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 상당의 라면과 밀가루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힘.

-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민족의 해외동포단체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법적으로 민간단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함.

■ 통일부, 2016 회계연도 北 식량 부족량 70만 육박(연합뉴스)

- 북한의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식량 부족분은 69만4천 규모로 추정됨. 27일 통일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의 북한 식량 수요량은 549만5천인데 비해 생산량은 480만1천으로 추정됨.
-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2014회계연도 34만, 2015회계연도 40만7천, 2016회계연도 69만4천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가뭄으로 감소하고 비료와 연료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식량 부족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남한 민간단체, 북에 구호물품 첫 전달(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9월 초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경북도의 이번 수해는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라고 북한 당국은 주장하고 있음.
- 당연히 국제사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긴급 구호물자를 많이 보내야 할 상황이지만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 현재는 유엔 차원에서만 긴급 구호물품이 지원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만5천 달러(2천 8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함경북도 지역에 보내 눈길을 끌고 있음.
- 한편 지난 19일 유엔 인도지원업무조정국(UN OCHA)이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지역 상황과 긴급 대응계획’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 실종자는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지금까지 약 6만9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적어도 14만 명이 큰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짐.

■ WFP, 북한 9월 배급량 300g···유엔 권장량 절반(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이달 들어서도 주민 한 명당 하루300g의 식량밖에 배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밝힘.
- 저조했던 지난달 배급량과 같은 양으로 지난 1, 2분기에 각각 기록했던 360g과 370g

수준에서 대폭 줄었음. 또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 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세계식량계획은 또 지난 7월부터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등 7개 도와 남포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함.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2천 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2016. 9. 29.

■ 유엔, 대북 홍수구호자금 목표액 10%도 확보 못해(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8월 말 두만강 인근 함경북도 지역을 강타한 태풍 라이언록 피해지역을 위해 유엔이 책정한 긴급구호자금은 모두 2천590만 달러임.
- 유엔 인도주의 국가팀(HCT)은 28일 현재 목표액 2천590만 달러 가운데 8%에 해당하는 230만 달러밖에 걷히지 않았으며, 기금 조성에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함.
- 유엔이 집계한 북한 수해지역의 공식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자 138명, 실종자 400명, 그리고 파손된 가옥이 3만여 채에 이룸.
- 아직까지 자세한 수해지역 복구 현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하면서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의 고통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6. 9. 30.

■ 유엔, 北 수해복구에 410만 달러 지원 결정(연합뉴스)

- 유엔이 북한의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과 식수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긴급대응지원금' 명목으로 410만 달러(한화 45억1천만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자금은 북한에서 활동 중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 3개 기구의 대북 수해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임.
- 이 가운데 WFP에 배정된 180만 달러(19억8천만 원)는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데 투입됨.

■ 북한 수재민 지원 시급…한국교회도 동참해주길(연합뉴스)

-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WCRC)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수해복구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을 호소함.
- WCRC는 전 세계 109개국 230개 교단이 소속된 세계 개혁교회 연합기구로 제리 필래이 회장, 크리스 퍼거슨 총무 등 8명은 지난 24~29일 북한을 방문함.
- 아울러 진보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힘.